

업계 · 정부 北 접근전략

해외현장에서의 북한기능인력 활용방안 필요

건설산업연구원 김준한 본부장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북한의 SOC 투자수요규모는 북한의 경제 및 SOC 현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1975년 이후 남한의 수준과 대비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결과 북한의 2010년 SOC 수준을 남한의 1985년, 1990년, 1995년 수준에 대비할 경우 각각 19조7천450억원, 44조3천600억원, 72조5천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현대 금강산 개발 및 한전의 KEDO 경수로 건설 등의 건설경험을 실증 분석한 결과 외국 인투자법, 대외경제협력 관련법 및 규정상 분쟁해결 관련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법과 규정도 외국업체에 불리하며 북한 건설현장에서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 측면에서도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채용과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며 작업 통제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전략방안으로는 투자순서상 시행착오 및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급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가 자리잡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 및 송배선, 항만 건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도로, 철도 및 공항 건설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SOC 투자를 남북 균형개발차원에서 접근하여 남북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훈련을 통해 북한인력의 기능을 향상시켜 건설부문의 인적자본을

축적,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해외현장에서 북한 기능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북한 SOC 진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는 먼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조정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한도 국내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대북 투자절차의 간소화, 담보조건의 완화 및 대출비율의 현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SOC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 우리 정부의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북한의 대일청구권 자금이나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금융기관의 SOC 공적차관을 활용하는 것도 현재의 북미, 북일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단기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주도 하에 25조원 규모의 체신금융사업기금 등으로 북한 SOC 투자기금을 마련하여 대북 SOC 투자 보증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임할 경우 남한기업들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무분별한 투자로 투자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한 민간 또는 민·관 형태의 가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대북 SOC 개발 협력사업을 총괄하며 산하에 산업별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SOC 분야, 제조업분야, 교역분야, 금융분야, 기타 관련분야 등 6개 실무 전담반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